

# 한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

이성봉교수

(서울여대 경영학과)

2019. 09. 03

# 목차

- I. 위기진단과 장수기업 육성 필요성
- II. 장수기업 장려관련 상속세제 국제추이
- III. 기업승계관련 상속세제의 주요 문제점
- IV.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

# **I. 위기진단과 장수기업 육성 필요성**

# 국가경쟁력과 장수기업의 중요성(1)

- 국가경쟁력(Nation's Competitive Advantage): 한 국가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해당 국가의 모든 기업들의 경쟁우위(Firms' Competitive Advantage)를 합친 것(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
- 한국은 현대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로 발전해옴. 그 배경에서 국가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 산업육성정책과 함께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세계적 반열에 오른 기업들이 있었기에 가능
- 눈부신 기술진보와 전세계적 무역투자자유화로 국경 없는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경영학교과서에서 흥미하는 경쟁우위 개념에 입각한 원가우위 전략 또는 차별화 전략이라는 사고의 틀만으로는 기업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기에 도달.
- 세계 석학들은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만으로는 부족하고 **축적우위(또는 축적우위: cumulated advantage)를 확보하는 기업**이 미래에 생존할 수 있다고 지적(HBR's 10 Must Reads 2018: The Definitive Management Ideas of the Year from Harvard Business Review, 2018)

# 국가경쟁력과 장수기업의 중요성(2)

- 축적우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정동 교수의 "축적의 길"에서도 지적되어 있는데, 특히 제조업에서 축적우위 창출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
- 한국경제 축적우위 창출의 핵심 필요조건이 장수기업을 위한 기업승계임.
  - 한국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현재 창업 1(또는 2)세대를 지나 2(또는 3세대) 기업승계 문제에 직면해 있음.
  - 60년대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 대기업들은 90년대 2세대 승계를 거쳐 현재 3세대 승계를 맞이하고 있고, 80년대 90년대 창업을 한 중소중견기업인들은 이제 2세대 승계에 직면하고 있음.
- 한편, 우리처럼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유사성이 커서 가장 치열한 글로벌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과 일본이 최근 전향적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상속증여세 개편을 시행.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 그리고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됨.
- 높은 상속세부담으로 대기업이든 중소중견기업이든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 등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음.
- **기업승계에 대한 국가간 제도경쟁**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업승계 상속세제 등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

## 100년 이상 장수기업 현황 (단위 : 개)

3만3,069



일본

1만2,780



미국

1만73



독일

8



한국

# 한국, 일본, 독일 장수기업

## 일본:

- 전 세계 200년 이상 된 기업 총 721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3937곳 (54%)이 일본 기업.
- 100년 이상 된 기업은 일본 전국에 3만3069곳
- 전통 료칸인 호시료칸은 718년 설립돼 업력만 1301년
- 1000년 이상 된 기업 7개, 500년 이상은 32개,

## 독일:

-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장수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의 대부분은 장수가족기업
- 200년 이상 된 기업만 1563곳
- 독일 전체 기업 309만9493곳(2006년 기준) 가운데 가족기업은 295만 2900곳(95.3%)

## 한국:

-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두산(1896년), 동화약품(1897년), 몽고식품(1905년), 광장(1911년), 보진재(1912년), 성창기업(1916년) 등 6곳
- 신한은행(옛 한성은행·1897년), 우리은행(옛 상업은행·1899년) 포함 8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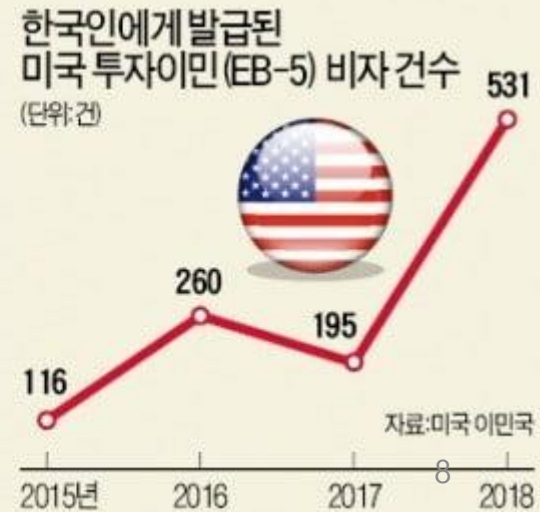
# '상속세 폭탄' 무서워... 부자들이 떠난다

(한국경제, 2019.05.19)



“오너 A씨가 싱가포르로 이민 신청을 한 뒤 현지에 투자회사 B사를 차린다. 이 투자회사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한국회사 C사의 지분 전량을 사들인다.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싱가포르 투자회사의 인수자금은 현지 금융회사나 사모투자회사(PEF) 등을 통해 마련한다. B사는 ‘외국인투자자’기 때문에 C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10~15% 안팎의 배당세만 낸다. 싱가포르에는 별도의 배당세가 없기 때문에 수익의 90%는 고스란히 A씨의 몫이 된다. A씨가 한국에 있었다면 배당수익의 최대 46.4%를 배당세로 내야 한다. 싱가포르에는 상속·증여세도 없어 A씨는 세금 한푼 안 내고 언제라도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다.”

싱가포르 전문 이민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법대로 상속·증여세를 내면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 보니 이런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세율을 낮추지 않는 한 세금을 피해 해외로 떠나는 트렌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직접투자 순유출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해외 직접 투자	금액 (억 달러)	295.9	309.3	285.5	303.6	395.9	446.0	497.8
	증감률 (전년대비%)	0.3	4.5	-7.7	6.3	30.4	12.6	11.6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 (억 달러)	107.1	98.9	122.2	165.8	107.9	135.6	163.9
	증감률 (전년대비%)	61.3	-7.7	23.6	35.8	-34.9	25.7	20.9
직접투자 순유출(억 달러)		188.8	210.4	163.3	137.8	288.0	310.4	333.9

주: 해외직접투자 송금기준,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기준

자료원: 기획재정부, 해외직접투자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II. 장수기업 장려관련 상속세제 국제추이**

# 한국 상속세제 개요

- 상속세 과세방식
  -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 과세: 유산세방식
  -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 과세: 유산취득세 방식
- 세율: 5단계 초과누진(10-50%)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 최대주주 할증평가
  - 최대주주 20%(중소기업 10%) 할증평가
  - 50% 초과 최대주주 30%(중소기업 15%) 할증평가
- 할증평가지 상속세율은 최대 65%

## 상속세법 개정 현황

### 상속세율

1950~1951년	20~90%·14단계
1952~1960년	10~75%·17단계
1961~1967년	5~30%·10단계
1968~1974년	5~70%·9단계
1975~1979년	10~75%·15단계
1980~1981년	7~67%·15단계
1982~1988년	7~60%·15단계
1989~1990년	10~55% (최고세율 구간 5억원 초과)·8단계
1991~1993년	10~55% (최고세율 구간 10억원 초과)·5단계
1994년	10~50% (최고세율 구간 10억원 초과)·5단계
1995~1996년	10~40% (최고세율 구간 5.5억원 초과)·4단계
1997~1999년	10~45% (최고세율 구간 50억원 초과)·5단계
2000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억원 이하: 10%</li> <li>·5억원 이하: 1000만원+ 1억원 초과액의 20%</li> <li>·10억원 이하: 9000만원+ 5억원 초과액의 30%</li> <li>·30억원 이하: 2억4000만원+ 10억원 초과액의 40%</li> <li>·30억원 초과: 10억4000만원+ 30억원 초과액의 50%</li> </ul>

### 상속지분 평가할증



최대주주 지분의 경우 평가액대로 과세, 그 외 주식은 평가액에서 10% 경감	1987~1992년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에 10% 할증평가 과세	1993~1996년
최대주주 보유 상장·비상장주식에 10% 할증평가 과세	1997~1999년
최대주주 지분이 50% 이하일 경우 20% 할증 과세 50% 초과일 경우 30% 할증 과세	2000~2002년
중소기업의 경우 할증을 절반으로 경감 조항 추가 (20%→10%, 30%→15%)	2003년 이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픽: 유정수 디자인가자

MT 리포트 머니투데이

# 한국 가업상속공제 제도: 공제요건

구분	내용
가업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b>중소기업</b>에 해당하거나, 직전 3년 평균 <b>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b>에 해당할 것</li> <li>② 가업의 영위기간이 <b>10년 이상</b>일 것</li> </ul>
피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li> <li>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재직할 것</li> <li>③ 피상속인은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li> </ul>
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상속인일 것</li> <li>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일 것</li> <li>③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li> </ul>

# 한국 가업상속공제 제도: 공제한도액

구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재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개인기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법인기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 등 $\times (1 - \text{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비율})$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공제한도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한국 가업상속공제 제도: 사후관리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율(7년 미만 100%, 7-8년 90%, 8-9년 80%, 9-10년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금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세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
  -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⑤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은 120%)에 미달하는 경우

# 한국 가업상속공제 제도: 연부연납

- 상속세 증여세 일반 연부연납기간은 5년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 10년 또는 20년으로 연장

가업상속재산 비율	연부연납기간
50% 미만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b>10년</b>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b>3년의 거치기간 허용</b> )
50% 이상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b>20년</b>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b>5년의 거치기간 허용</b> )

# 새로 도입된 납부능력요건 (2019년부터 적용)

- 상증세법 제18조제3항: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19.>
- 상증세법시행령 제15조제7항: 법 제18조제3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한국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증여
- 증여세 일반 누진세율(10~50%)이 아닌 10% 또는 20%의 저율로 증여세 부담; 상속세 계산시 기한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상속세 산정
- 증여세 산출세액
  - <가업자산 상당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증여한도)-5억원> x 10%,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구분	내용
가업 요건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②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
증여자 요건	①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 포함) ② 최대주주로서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증여세 추징사유	증여 후 7년 이내에 다음 사유 발생 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가산세)을 추징함 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 유지하지 않는 경우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③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④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2019년 6월 11일 발표 개편방안

- 사후관리완화
  - 사후관리기간: 10년 -> 7년으로 단축
  - 업종변경허용범위: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중분류
  - 자산유지의무: 경영상 필요로 기존설비 처분하고 신규설비 대체 취득시 예외인정
  - 고용유지의무: 중견기업 120% -> 100%
-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배제
  -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 대상기업: 매출액3천억 미만 -> 전체 중소·중견기업
  - 피상속인요건: 피상속인 경영·지분보유기간 단축(10년->5년)
  - 상속인요건: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요건 삭제

# 상속세율 OECD국가 국제비교

상속세율>소득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상속세 폐지 (또는 미시행)
일본(55%>45%) 한국(50%>42%) 스위스(42%>11.5%) 미국(40%>37%) 덴마크(36.25%>23.08%) 스페인(34%>22.5%) 헝가리(18%>15%)	프랑스(45%=45%)	상속세율 10% 초과	캐나다('71년) 호주('79년) 이스라엘('81년) 뉴질랜드('92년) 포르투갈('04년) 슬로바키아('04년) 멕시코('05년) 스웨덴('05년) 오스트리아('08년) 체코('14년) 노르웨이('14년) 에스토니아(미시행) 라트비아(미시행)
		영국(40%<45%), 아일랜드(33%<40%), 벨기에(30%<50%), 독일(30%<45%), 칠레(25%<40%), 네덜란드(20%<52%), 핀란드(19%<31.8%), 슬로베니아(14%<50%)	
		상속세율 10% 이하	
		그리스(10%<45%), 터키(10%<35%), 아이슬란드(10%<31.8%), 폴란드(7%<32%), 룩셈부르크(5%<40%), 이탈리아(4%<43%)	

자료원: :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19. (2018.7.5. OECD에 가입한 리투아니아는 미포함)

# 주요국 상속세 실효세율 비교(2017)

구분	한국 (10억원)	일본 (1억엔)	독일 (1백만유로)	미국 (1백만달러)
과세표준(①)	8,651	155,884	23,223	83,570
납부세액(②)	2,430	20,185	5,013	19,940
실효세율 (②/①)	28.09%	12.95%	21.58%	23.86%

각국 국세청 통계자료. 각국 통계에서 사용한 납부세액 명칭은 다음과 같음. 한국은 총결정세액(Total Determined Tax Amount), 일본은 納付税額(Amount of tax payment), 독일은 실제확정세액(Tatsächlich festgesetzte Steuer), 미국은 납부세액(Net estate tax)

#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실효세율

과세표준	총상속 재산가액 (A)	과세 표준 (B)	산출 세액 (C)	증여세 액공제 (D)	외국납 부세액 공제(F)	결정 세액 (G)	실부담 세액(E= D+F+G)	G/B (1)	G/A (2)	C/B (3)	E/A (4)	E/B (5)	명목 최고 세율
1억이하	8,775	666	70	37	-	33	70	5.0	0.4	10.5	0.8	10.5	10%
1억초과~3억이하	14,980	3,272	445	117	-	322	439	9.8	2.1	13.6	2.9	13.4	20%
3억초과~5억이하	11,911	4,081	681	143	-	517	660	12.7	4.3	16.7	5.5	16.2	
5억초과~10억이하	18,890	8,741	1,878	323	-	1,476	1,799	16.9	7.8	21.5	9.5	20.6	30%
10억초과~20억이하	21,094	12,258	3,484	432	-	2,885	3,317	23.5	13.7	28.4	15.7	27.1	40%
20억초과~30억이하	9,763	6,858	2,290	350	-	1,798	2,148	26.2	18.4	33.4	22.0	31.3	
30억초과	55,567	50,711	23,473	2,520	2,046	17,716	22,282	34.9	31.9	46.3	40.1	43.9	50%
30억초과~50억이하	10,277	7,620	2,896	443	-	2,298	2,741	30.2	22.4	38.0	26.7	36.0	
50억초과~100억이하	10,421	7,964	3,445	456	-	2,830	3,286	35.5	27.2	43.3	31.5	41.3	
100억초과~500억이하	17,542	17,372	8,296	1,146	1	6,853	8,000	39.4	39.1	47.8	45.6	46.1	
500억초과	17,328	17,755	8,837	475	2,045	5,734	8,254	32.3	33.1	49.8	47.6	46.5	
경정	21	-75	-165	52	16	-448	-380	-	-	-	-	-	50%
100억초과	34,870	35,127	17,133	1,621	2,046	12,587	16,254	35.8	36.1	48.8	46.6	46.3	
총계	141,001	86,512	32,156	3,973	2,061	24,299	30,333	28.1	17.2	37.2	21.5	35.1	

주 : 1. 경정이란 전년도 이전 결정분에 대한 경정분 2.증여세액공제란,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10년 이내에 재상속 될 경우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 3. 해외납부세액 공제란, 외국법령에 따라 상속과 관련하여 이미 부담한 세액을 일정 범위 내 공제 / 자료 : 국세청

# 한국과 독일의 상속세 실효세율 추이 비교(2013-2017)

구분	연도	총상속 재산가액 (①)	과세표준 (②)	결정세액 (③)	실효세율	
					총상속 재산대비 (③/①)	과세표준 대비 (③/②)
독일	2013	30,485	17,298	3,627	11.90%	20.97%
	2014	38,305	20,364	4,327	11.30%	21.25%
	2015	37,713	20,774	4,407	11.69%	21.21%
	2016	43,590	26,238	5,708	13.09%	21.75%
	2017	42,609	23,223	5,014	11.77%	21.59%
한국	2013	8,649	5,135	1,363	15.76%	26.54%
	2014	10,937	6,513	1,745	15.96%	26.79%
	2015	10,184	6,136	1,844	18.11%	30.05%
	2016	12,842	7,679	2,256	17.57%	29.38%
	2017	14,100	8,651	2,430	17.23%	28.09%

(단위): 독일 1백만유로, 한국 10억원; 주: 독일 통계표상 용어: 총상속재산가액(Wert der Erwerbe vor Abzug); 과세표준(Steuerpflichtiger Erwerb); 결정세액(Tatsächlich festgesetzte Steuer) 자료원: 독일: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statistik; 한국: 국세통계연보

# 한국과 독일의 증여세 실효세율 추이 비교(2013-2017)

구분	연도	총증여 재산가액 (①)	과세표준 (②)	결정세액 (③)	실효세율	
					총증여 재산대비 (③/①)	과세표준 대비 (③/②)
독일	2013	39,879	11,485	1,090	2.73%	9.49%
	2014	70,498	13,429	1,101	1.56%	8.20%
	2015	64,297	14,266	1,080	1.68%	7.57%
	2016	65,190	11,508	1,128	1.73%	9.80%
	2017	54,465	11,170	1,276	2.34%	11.42%
한국	2013	11,191	11,253	1,703	15.22%	15.13%
	2014	12,884	14,270	1,879	14.58%	13.17%
	2015	15,284	16,548	2,363	15.46%	14.28%
	2016	18,208	20,633	2,724	14.96%	13.20%
	2017	23,344	28,164	3,976	17.03%	14.12%

(단위): 독일 1백만유로, 한국 10억원; 주: 독일 통계표상 용어: 총증여재산가액(Wert der Erwerbe vor Abzug); 과세표준(Steuerpflichtiger Erwerb); 결정세액(Tatsächlich festgesetzte Steuer) 자료원: 독일: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statistik; 한국: 국세통계연보

# 독일 기업승계 상속공제 제도 변천\*

- 제1기 (2008년 12월 31일 이전)
  - 독일 상속증여세법상 별도 기업상속공제제도가 없던 시기
  - 기업재산 225,000유로 특별상속공제 및 35% 특별감면
  - 신탁재단 및 지분관리회사 등을 활용한 기업승계
- 제2기 (2009년 1월 1일 – 2017년 6월 21일)
  - 상속증여세법상 기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기업승계 상속공제 85%(또는 100%)도입(사업/고용조건)
- 제3기 (2017년 6월 22일 – 현재)
  - 독일헌법재판소의 부분 불합치 판결 이후 대폭적인 제도 보완 이후 운영
  - 기업승계시 상속공제 85%(또는 100%) 제도는 유지하되,
  - 감면대상 한도액(26백만유로 이하) 설정, 가족중심 기업에 대한 추가공제 도입 및 대기업승계에 대한 별도의 공제요건 신설

\* 자료원: 이성봉, 독일 기업승계제도의 변천과정 분석과 시사점, 한독경상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 2019. 5. 17.

# 독일 상속세 기본공제

상속인 그룹	피상속인과의 관계	인적공제 (1,000유로)	특별생계비공제 (1,000유로)
I그룹	배우자	500	256
	자녀	400	10.3 – 52 (연령별 차등)
	손자녀	200	-
	사망한 피상속인의 부모 및 조부모	100	
II그룹	생전증여의 경우 부모 및 조부모	20	-
	형제자매 및 그 자녀, 의붓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의 배우자 및 이혼한 배우자		
III그룹	기타 모든 상속인	20	-

# 독일 상속세율

과세표준 1천 €	상속인그룹 I	상속인그룹 II		상속인그룹 III
		2009년 까지	2010년 이후	
75 이하	7	30	15	30
75-300	11		20	
300-600	15		25	
600-6,000	19		30	
6,000-13,000	23	50	35	50
13,000-26,000	27		40	
26,000 초과	30		43	

# 제1기 기업승계 상속세 부담

- 상속세법상 사업용 재산 상속에 대한 특례
- 특례대상 국내소재 사업재산(Inländisches Betriebsvermögen):
  - 사업체, 공동사업자지분, 농업및산림업 재산, 자본회사  
의 지분(25%이상, 지분풀링계약이 있는 경우 25% 미만 지분도 해당)
- 특례내용
  - 사업재산 특별상속공제(Freibetrag): 225,000 €
  - 사업재산 특별감면공제(Verschonungsabschlag):  
35%\*(상속 사업용 재산가액-225,000 €)
  - 상속인그룹 II, III에 대한 상속세 부담경감  
(Entlastungsbetrag): (그룹 I의 상속세와 차액의 88%  
를 경감)
  - 상속 사업용 재산 5년 보유 조건(Behaltenfrist)

# 제2기 기업승계 상속세 감면(1)

- 2008.12.24 **상속세개혁법안(Erbschaftssteuerreformgesetz)**을 통해서 기업승계 감면제도 도입(2009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
  - 원활한 기업승계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 사업재산에 대해서 85% 공제(Regelverschonung) 또는 100% 공제(Optionsverschonung) 선택
  - 비업무용재산(Verwaltungsvermögen)개념 도입. 동 재산이 사업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기업만 적용: 85%공제(동 재산 50% 이하), 100%공제(동 재산 10% 이하)
  - 동 재산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동 재산까지 포함한 사업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Alles oder Nichts-Prinzip 적용)
  - 비업무용재산: 임대부동산, 25% 이하 타회사 지분, 사적 용도의 예술품
- 85% 공제(일반공제)적용 사후관리요건:
  - 승계기업유지: 7년
  - 최소임금유지: 승계이후 7년간 승계직전 5년 연평균임금총액의 650% 이상 유지
- 100% 공제(선택공제)적용 사후관리요건:
  - 승계기업유지: 10년
  - 최소임금유지: 승계이후 10년간 승계직전 5년 연평균임금총액의 1,000% 이상 유지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최소임금 유지조건 면제대상 소기업: 10인 이하 소기업

# 제2기 기업승계 상속세 감면(2)

- **2009.12.22 경제성장촉진법안 (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의 일환으로 기업승계공제요건의 완화(2010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21일까지 아래 변경내용 적용)**
- 85%공제 적용요건:
  - 비업무용재산 비중 동일(50% 이하)
  - 승계기업유지 7년->5년
  - 최소임금: 7년간 650% 이상 -> 5년간 400% 이상
- 100%공제 적용요건:
  - 비업무용재산 비중이 동일(10% 이하)
  - 승계기업유지 10년 -> 7년
  - 최소임금: 10년간 1,000% 이상 -> 7년간 700% 이상
- 최소임금 유지조건 면제 대상: 10인 이하 -> 20인 이하 기업으로 확대

#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

- 2012. 10 연방재정법원의 기업승계감면제도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위배가능성으로 위헌법률심사 제청
- 2014. 12. 17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Urteil des Ersten Senats vom 17. Dezember 2014 - 1 BvL 21/12 -)
  - 기업의 재산승계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그 범위와 개방된 활용가능성으로 인해서 평등원칙(Art. 3 Abs. 1 GG)에 위배됨.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 존속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상속세를 상당한 수준 또는 전액 면제하는 것은 입법권자가 실행할 수 있음. 각각의 면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함.
  - ① 중소기업을 벗어난 대기업의 기업재산승계의 경우 그 필요성 심사 없이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② 임금유지규정은 원칙상 합헌임. 그러나 2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 최소임금요건을 면제해준 것은 적정하지 않음.
  - ③ 비업무용재산이 5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사업재산을 별도의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무제한으로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은 헌법에 일치하지 않음.

# 비업무용재산 50% 미만 “Alles oder Nichts-Prinzip” 관련 개정사항

- 기존: “기업재산(Betriebsvermögen) = 총 비업무용재산 + 그외 기업재산
- 추가: “기업재산 또는 감면가능 사업재산(Begünstigungsfähiges Vermögen)” = “**감면재산(Begünstigtes Vermögen)**” + “**감면불가 비업무용재산(Nicht begünstigtes Verwaltungsvermögen)**”
- “**감면재산**”만 일반공제(85%)/선택공제(100%) 적용, “**감면불가 비업무용재산**”은 과세
- **일반공제 및 선택공제 요건**
  - 일반공제 적용가능: 비업무용재산이 기업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90% 이하
  - 선택공제 적용가능: 비업무용재산이 기업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이하
  - 동 요건 심사에서 총 비업무용재산중에서 연금충당금관련 부분은 제외한 비업무용재산가액이 전체 기업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함.
- **감면재산 산정(Oppel, 2016)**
  - 감면재산 = 기업재산 - 감면불가 비업무용재산
  - 감면불가 비업무용재산 = 단기재무재산\*(①) + 재무재산제외 단기비업무용재산(②) + 순 비업무용재산\*\*(③) - <기업재산-(①+②+③)> x 0.1
    - \*단기의 의미: 과세시점 2년 이내에 기업이 확보한 확보된 재산이며, 재무재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의미
    - \*\*순 비업무용재산(Nettowert des Verwaltungsvermögens) = <(일반재무자산 - 연금충당금제외 기타부채) - (기업재산 x 0.15)> + 재무재산과 단기비업무용자산을 제외한 비업무용재산 - 연금충당금제외 기타부채\*\*\*
      - \*\*\* 연금충당금제외 기타부채가 연금충당금 과 단기재무자산을 합친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 고려하지 않음.
  - **감면불가 비업무용재산은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총 비업무용재산의 약 20-30% 수준이 됨**
- 비업무용재산 리스트 일부 보완: 회사역사관련 예술품으로 박물관 전시용은 제외

# 20인 이하 기업 인건비요건 면제 등 소규모 기업승계 및 가업성격 강한 기업승계 관련

-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 임금요건 도입**
  - 5명이하 기업: 급여요건 면제
  - 6명-10명 기업
    - 85% 감면시 5년간 250% 유지
    - 100% 감면시 7년간 500% 유지
  - 11명-15명
    - 85% 감면시 5년간 300% 유지
    - 100% 감면시 7년간 565% 유지
  - 16명 이상: 일반 승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 **15만 유로의 기업승계 기본공제(Abzugsbetrag) 도입**
  - 승계 기업재산이 15만 유로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만큼을 15만유로에서 차감, 따라서 45만 유로이상의 기업재산인 기본공제는 0이 됨 (§ 13a Ab.2 ErbStG).
- **추가로 인적요소가 강한 가족기업의 경우 감면재산의 30% 사전차감 (Vorwegabschlag) 도입**
  - 가업성격이 강한 기업승계 혜택 강화(정관에 승계전 2년, 승계후 20년 동안 지분을 가족구성원, 공동주주 및 가족재단에게만 이전하는 것을 정한 경우임).(Layer, 2017)
  - 사전차감이 추가로 적용될 경우 € 26백만 유로의 감면재산 한도액은 € 37.14백만 유로로 증가함

# 대규모 사업재산 승계의 경우

- 감면재산 € 26백만(사전차감 적용시 € 37.14백만)까지 동일한 적용.
- 산출된 감면재산이 이 금액 이상인 경우에 공제방식은?
  - ① 감면율 감축 방식 ② 필요성 심사 중 선택
- ① 감면율 감축 방식(Antrag of Verschonungsabschlag)
  - 감면율 85%(또는 100%)에서 계속 하락(€ 75만마다 1%씩) 하여 € 90백만(사전차감 적용시 € 128.7백만)를 초과하면 0%가 됨.
- ② 감면 필요성 심사 방식(Antrag of Verschonungsbedarfsprüfung)
  - 감면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이 상속인의 기보유 사재 또는 감면불가 비업무용재산과 상속받는 사재 및 감면불가 비업무용재산 등을 모두 합친 금액(상속세납부활용가능재산: Verfügbares Vermögen)의 50%로 총당할 수 없는 경우 필요성 심사 통과(§ 28a ErbStG)
  - 이 기준에 충족하면 감면재산에 대한 정상 상속세 중 상기 상속세납부활용가능재산의 50%의 상속세 금액까지만 과세하고 나머지 상속세는 전액 감면
  - 필요성 심사 방식을 통해 상속세 감면되면 7년 급여 700% 및 유지 조건 적용(Stiftung Familienunternehmen, 2017)

# 독일 기업승계 상속공제제도관련 잘못 알려진 부분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583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2019년 5월 15일\*
  - "비사업용자산이 50%이하가 되어야 85%공제" -> **90%를 초과하면 85%공제 불가(사업용재산이 10%이상이면 공제가능)**
  - "...비사업용자산이 10%이하가 되어야 100%공제" -> **20%를 초과하면 100%공제 불가(사업용재산이 80%이상이면 공제가능)**
  - "...26백만유로 이하인 경우에만 ... 받을 수 있고 26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용자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대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생산활동에 집중하면서 상속세 납부 시 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사정을 엄격히 인정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넓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26백만 유로 초과 대규모 기업재산 승계의 경우 최대 90백만 유로(사전공제시 128.6백만 유로)까지 체감적 공제를 선택하거나, 상속증여 기업재산 금액에 제한 없이 필요성 심사 후 - 상속인의 기 보유 사재 및 비업무용재산, 상속받는 사재 및 비업무용재산 등 합계의 50% 금액으로 상속세 납부 불가능할 경우 - 동 금액 초과 상속세 전액 감면

\* 동 자료 이외에 여러 언론이나 연구자료 등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았지만 동 자료만을 언급한 것은 제도개선에 참고될 가능성이 높은 최근 국회발간자료이기 때문임. 동 자료는 독일 제도에 대해서 국내에서 발표된 기존의 미비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밝힘.

# <독일의 기업승계 상속증여 공제제도>

기업승계재산

-

비업무용재산 중 승계혜택 제외 금액

=

기업승계공제 혜택대상 기업재산

가업성격 강한 승계(정관에 승계전 2년, 승계후 20년 동안 지분을 가족구성원, 공동주주 및 가족재단에게 이전하는 것을 정한 경우) 최대 30% 사전공제

혜택대상 승계재산 금액 26백만€(약 350억원)

① 26백만€ 이하  
(사전공제시 37.14  
백만€(500억이하))

26백만€(사전공제시 37.14백만€)초과시 ②,③ 선택

② 체감적 공제

③ 필요성 심사 후 감면

- 85% 공제: 사후관리 5년간 사업유지 및 인건비 총 400%유지\*
- 100% 공제: 사후관리 7년간 사업유지 및 인건비 총 700%유지\*

- 85%/100% 공제: 사후관리요건 좌동
- 90백만€(약1,200억, 사전공제시 128.6백만€,약1,700억) 까지 매75만€마다 1%씩 공제율 축소적용

- 상속인의 기 보유 사재 및 비업무용재산, 상속받는 사재 및 비업무용재산 등 합계의 50% 금액으로 상속세 납부 불가능할 경우 동 금액 초과 상속세 전액 감면
- 7년 사업/인건비 700% 유지

\* 총 인건비 유지조건 승계 직전 5년간 회사의 연평균 인건비를 기준으로 함.

# 기업승계공제 현황 한·독 비교: 상속

(단위: 독일 1백만 유로 및 한국 10억 원)

구분	연도	과세		과세미달		합계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당 공제액
독일	2014	7,059	3,263	3,082	3,176	10,141	6,439	0.6
	2015	7,789	3,481	3,296	1,272	11,085	4,753	0.4
	2016	8,207	3,169	3,678	2,039	11,885	5,208	0.4
	2017	7,410	2,448	3,337	4,433	10,747	6,881	0.6
	평균	7,616	3,090	3,348	2,730	10,965	5,820	0.5
한국	2014	63	94	5	4	68	98	1.4
	2015	57	164	10	6	67	170	2.5
	2016	60	295	16	22	76	317	4.2
	2017	75	189	16	32	91	221	2.4
	평균	64	186	12	16	76	202	2.6

자료원: 독일, Statistisches Bundesamt, Finanzen und Steuern,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각 연도;  
한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업승계공제 현황 한·독 비교: 증여

(단위: 독일 1백만 유로 및 한국 10억 원)

구분	연도	과세		과세미달		합계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당 공제액
독일	2014	2,367	33,864	8,487	25722	10,854	59,586	5.5
	2015	2,552	24,584	10,369	27444	12,921	52,028	4.0
	2016	2,429	18,255	10,733	34775	13,162	53,030	4.0
	2017	1,850	17,939	8,722	24123	10,572	42,062	4.0
	평균	2,300	23,661	9,578	28016	11,877	51,677	4.4
한국	2014	73	127	33	12	106	139	1.3
	2015	52	101	24	6	76	107	1.4
	2016	96	193	34	8	130	201	1.5
	2017	116	246	57	17	173	263	1.5
	평균	84	167	37	11	121	178	1.4

자료원: 독일, Statistisches Bundesamt, Finanzen und Steuern,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각 연도;  
한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업승계공제현황 한·독 비교: 상속증여

(단위: 독일 1백만 유로 및 한국 10억 원)

구분	연도	과세		과세미달		합계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당 공제액
독일	2014	9,426	37,127	11,569	28,898	20,995	66,025	3.1
	2015	10,341	28,065	13,665	28,716	24,006	56,781	2.4
	2016	10,636	21,424	14,411	36,814	25,047	58,238	2.3
	2017	9,260	20,387	12,059	28,556	21,319	48,943	2.3
	평균	9,916	26,751	12,926	30,746	22,842	57,497	2.5
한국	2014	136	221	38	16	174	237	1.4
	2015	109	265	34	12	143	277	1.9
	2016	156	488	50	30	206	518	2.5
	2017	191	435	73	49	264	484	1.8
	평균	148	352	49	27	197	379	1.9

자료원: 독일, Statistisches Bundesamt, Finanzen und Steuern,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각 연도;  
한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독일 기업승계공제에서 증여의 의미

(단위: 1백만 유로)

연도	총증여 재산가액 (①)	증여세 과세표준 (②)	증여공제 등 (①-②)	증여 기업승계 공제	상속 기업승계 공제	상속증여 기업승계 공제
2014	70,498	13,429	57,069	59,586	6,439	66,025
2015	64,297	14,266	50,031	52,028	4,753	56,781
2016	65,190	11,508	53,682	53,030	5,208	58,238
2017	54,465	11,170	43,295	42,062	6,881	48,943
평균	63,613	12,593	51,019	51,677 (89.9%)	5,820 (10.1%)	57,497 (100.0%)

- 독일 증여세 과세에서 공제액이 거의 기업승계증여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 독일에서 기업승계공제에서 상속:증여 비율이 1:9로 대부분 기업승계는 증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독일 기업 대부분 승계가 소유경영자 생전에 준비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는 의미.
  - 독일 기업승계가 기업경영권 자체 승계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선대 소유경영자의 경영노하우 등의 기업의 지속적 경쟁력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실질적 경영승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시사함.

# 일본의 가업승계 10년 한시적 특례조치

	특례조치	일반조치
사전계획수립 등	5년 이내 특례승계계획 제출 (2018 년 4월 1일 ~ 2023 년 3월 31일)	불필요
적용기한	10년 이내에 상속·증여 (2018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없음
대상주식 수	전체주식(그러나 의결권에 제한이 없는 주식에 한함)	총 주식수의 최대 3 분의 2까지 (단, 의결권에 제한이 없는 주식에 한함)
납세 유예 비율	100%	상속 : 80%、증여 : 100%
후계자의 수	3인 이내	1인
고용유지 요건	원칙적으로 승계 후 5 년간 평균 80%의 고용 유지가 필요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보고서(공인경영혁신등지원기관)의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한함을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음으로써 계속 납부가 유예	승계 후 5 년간 평균 80%의 고용 유지가 필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제	양도 대가 금액 등에 따라 다시 계산한 유예세액을 납부 종전의 유예 세액과의 차액을 면제	없음 (유예세액을 납부)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	60세 이상 증여자에서 20세 이상의 사람에게 증여	60세 이상 증여자가 20세 이상 추정 상속인 (직계 비속)· 손자에게 증여

# **III. 기업승계관련 상속세제의 주요 문제점**

# 1.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

-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최고세율이 두 번째로 높으며, 특히 상속재산가액규모가 클수록 상속세 부담 증가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누진성 구조가 매우 강한 세율형태임.
- 상속재산가액에서 규모가 큰 경우는 대부분 기업지분인 경우라는 점에서 한국의 높은 상속세는 기업승계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음.
-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과의 실효세율(납부세액/과세표준) 비교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독일과 상속재산대비 납부세액기준의 실효세율(담세율)로 비교해보면 독일은 약 11-13%수준인 반면, 한국은 16-18%수준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남.

## 2.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

- 가업상속공제제도상 과도한 제한규정으로 입법취지(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경영노하우의 전수 등 국민경제에 계속 기여)를 전혀 살리지 못함.
- 기업승계공제 활용 한·독 비교에서 보듯이, 우리가 제도도입에 많은 참조를 한 독일의 활용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금액이나 건수 등이 미미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임
- 실제 중소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업상속공제제도관련 과도하게 엄격한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조항으로 기업들은 그 활용을 꺼리고 대신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적 승계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음.
- 독일의 경우 가업성격이 강한 경우 30% 사전공제를 포함 500억 공제를 한도 내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지분보유하고,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이어야 함. 이러한 조건을 맞추고 동시에 사후적으로 10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수 연인원 1,000%(중견기업 1,200%)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기꺼이 질 수 기업이 몇 개나 될까?
- 경우에 따라 오너의 갑작스런 변고로 승계준비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오너 유족이 직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넘기려 하는 경우 직원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받게 되고,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직원들에게 승계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제도임

### 3. 경영권 승계에 대한 과잉 정책 대응

- 최대주주 상속지분에 대한 할증평가 과세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우며, 최대주주 상속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이해될 수도 있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할증평가 받음.
- 여기에 공익법인 출연의 경우 의결권 행사하지 않은 조건에만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 20%까지 주식출연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
- 그 동안 공정거래법의 발전을 통해서 대기업집단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금지, 순환출자구조 해소 등을 통해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편법적 승계 채널을 거의 차단한 반면, 상속세 부담 완화, 차등의결권 도입 등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해외의 경우(이성봉, 2016, 2017a, 2017b, 2017c) 경영권 지분 승계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 지분풀링협약(family share-pooling agreement), 가족재단, 공익재단 등 다양한 경영권 승계 대안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대비가 됨
- 기업승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반기업 정서와 소유경영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 특히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우월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상속세제는 전문경영체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음. 전문경영체제로의 선택은 주주의 몫이지 사회제도로 강제되는 것이 아님.

# 해외대기업 경영권 승계사례

기업 (가족, 국적)	승계 세대	기업승계 관련 활용 제도	특징 및 시사점
<b>Ford</b> (Ford, 미국)	·4세대	·차등의결권 ·공익재단 ·차등의결권 가문 내 거래 협약	·창업주 Henry Ford가 1935년 차등의결권과 재단설립을 결합, 상속세 부담 최소화 및 지배력 유지하는 방식으로 승계 ·차등의결주에 대한 가문 내 주식거래 협약으로 세대를 넘어 지배력 희석 문제 해결 ·Ford Foundation, Ford Fund 등을 통한 공익기여
<b>BMW</b> (Quandt, 독일)	·3세대	·지배력 유지 및 승계목적 의 지분관리회사	·Quandt 그룹의 승계과정에서 BMW 지분은 마지막 결혼에 따른 직계가족에게만 승계 하여 지분 분산 및 갈등 방지 ·직접적인 지분증여가 아닌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BMW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증여하는 방식의 승계플랜을 통해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지배력 유지
<b>Henkel</b> (Henkel, 독일)	·5세대	·가족지분 풀링협약 ·가족 설립 재단	·가족 간 합의를 통한 총수 선출 및 가문 지배력 희석방지를 위한 가족지분 풀링협약 ·1985년 최초 체결, 3회 연장으로 2033년 유효 ·협약은 판례를 통해 민법상 조합으로 법적 지위 인정 ·가족 간 다양한 소통기회로 유대감 강화 및 기업가치 공유
<b>Heineken</b> (Heineken, 네덜란드)	·4세대	·다층적 지주회사 ·공익재단	·2단계 지주회사지배구조로 승계과정 지배력 유지와 상속세 완화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세 완화 ·여러 세대에 걸친 기업존속을 고려한 장기적인 기업승계 계획
<b>발렌베리</b> (Wallenberg, 스웨덴)	·5세대	·차등의결권 ·지주회사 ·공익재단	·지주회사와 차등의결권으로 지배력 유지 ·지주회사는 공익재단을 통해 지배하고, 공익재단 출연으로 상속세 부담 완화 ·공익재단을 통한 활발한 사회기여활동으로 사회적 인식 제고

자료원 : 이성봉, 해외 대기업의 승계사례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6, p.14.(김용민, 상속세, 46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제9차 조세정책 세미나, 2019.05.13 추가내용)

## **IV.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

# 중소기업 및 대기업 상속문제를 구분된 시각에서 접근

- **(대기업) 경영권 방어와 경영권 영속성 제고 차원에서 상속세제 개선 필요**
  -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現 상속세 체계는 기업승계 시 상속세재원마련을 위한 지분매각으로 경영권 상실 우려가 큼.
  - 특히,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지분을 매각하면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타깃이 될 수 있음.
  -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상속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체화된 노하우와 기술이전 등 기업승계 차원에서 상속세제 개선 필요**
  - 상속세제 개편을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체화된 노하우와 기술 같은 핵심역량을 유지하면서 선대로부터 이어진 장인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기적 고용 안정, 기술 전수로 기업 성장의 토대를 육성하고 이는 다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작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상속세율의 인하

- **실효세율을 독일(20%수준)으로 낮추는 상속세율 구조 재설계**
  - 높은 상속세로 인한 고용감소, 성장둔화, 국부유출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30%에 육박하는 높은 상속세 실효세율을 일본(10%초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독일(20%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상속세율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을 제안함.
- **상속세 최고세율은 소득세율 최고세율 수준인 40%대로 인하**
  - 독일처럼 상속인 그룹을 피상속인과의 관계 긴밀성에 따라 구분하고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과 함께 우선 현행 50%에서 소득세율과 비슷한 40%대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과세표준인 30억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독일의 경우 직계비속 최고세율 30% 적용 과세표준이 26백만 유로(약 350억원)로 우리보다 10배 이상이 높음.
-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이 경우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공평과세원칙에도 부합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 제고

- **가업승계제도의 유연성 대폭 확대**

- 독일처럼 건전한 기업승계를 추구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기업 상황에 맞는 상속증여세 경감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제도의 유연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의 제약요건들에 대한 대폭 완화 또는 한시적 적용배제**

- 일본 아베정권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 고용관련 사후관리 요건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제한적 요건을 배제하여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2018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은 파격적임.
- 중소중견기업인들이 가업상속공제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제약사항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업성격이 큰 승계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 도입**

- 가업성격이 강한 기업의 승계와 일반기업의 승계를 구분하고, 가업성격이 강한 중소중견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독일의 30% 추가공제처럼 공제를 대폭 확대

# 대기업 경영권 승계 대안 마련

- **현행 상속세제 상황에서 대기업 승계와 관련, 경영권을 위협받는 지분 매각을 하지 않고 상속세 재원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회사와 함께 상속세 자원 확보 방안 제시**
  - 연부연납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사와 상속인 그룹이 지분, 사재 및 회사의 비업무용자산 등을 활용하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 사재 및 회사의 비업무용자산 처분 등 10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특례조치를 제도화하는 것임.
  - 이 경우 사후관리요건으로 고용요건을 특례조치와 연계시킬 수 있음.
- **차등의결권의 제한적 도입**
  -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상속 지분을 만큼 차등의결권을 상속인 보유 지분에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가능
- 이러한 대안들은 모두 국가와 국민이 대기업 경영권 승계시 상속세 문제를 완화해주어 원활한 승계 경로를 열어주는 대신, 대기업이 그에 맞는 고용증대 및 유지, 국내투자 활성화, 공익사업의 수행 등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 더 크게 공헌하도록 유인하는 것임.

# <참고문헌>

- 국회입법조사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제1583호, 2019년 5월 15일
- 김용민,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제9차 조세정책 세미나, 2019.05.13.
- 머니투데이, "LG회장 이름값 '1200억'...할증 상속세의 역사", 2018.11.12.
- 이성봉, "해외 대기업을 승계사례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6
- 이성봉, "독일 BMW 승계 사례 분석과 한국의 기업 승계에 대한 정책제언", 경상논총, 35(2), 2017a, 21-40.
- 이성봉, "가족협약을 통한 기업승계 해외사례 연구: 독일 Henkel과 프랑스 Mulliez를 중심으로, 칠서경제저널, 20(3), 2017b, 109-127.
- 이성봉, "프랑스 Bouygues 그룹의 경영권 승계사례 분석과 시사점", EU학연구, 22(2), 2017c, 38-57.
- 이성봉, "독일 기업승계제도의 변천과정 분석과 시사점", 한독경상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 2019. 05.17.
- 이정동, "축적의 길", 지식노마드, 2017.
- 임동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19
- 한국경제, "'상속세 폭탄' 무서워...부자들이 떠난다", 2019.05.19.
- Bertram Layer, Anwendungserlass zur Erbschaftsteuerreform, *FUS*, 2017, 180-183.
- Florian Oppel, Ende gut, alles gut? – Überblick über die Neuregelung der sachlichen Steuerbefreiungen für Unternehmensvermögen im ErbStG, *SteuK*, 2016, 469-477.
- Michael Porter et al., *HBR's 10 Must Reads 2018: The Definitive Management Ideas of the Year from Harvard Business Review*, 2018. 매일경제신문사, 하버즈비즈니스리뷰 경영인사이트 BEST 11.
- Stiftung Familienunternehmen, *Das neue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recht*, 2017.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